



이달 첫 노사협의회 ... 복지현안에 집중 노조 요구안 9개 항목 사측에 전달

지난달 신입 경영진 취임후 첫 노사협의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집행부 회의를 열어 조합원의 여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노조요구안을 마련, 회사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다.

노조 요구안은 크게 9개 항목으로 정기휴가 사용의 무제 활성화, 건강검진 확대, 주택구입자금 지원한도 상향 등 그간 시행되지 못했거나 미진했던 복지 현안에 집중됐다.

노조는 각 요구안의 항목별로 타사의 사례를 비교, 현실성과 객관성 유지에 주력했다.

이번 노사협의회는 올들어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새 경영진의 회사 운영 방향은 물론 발전적인 노사 관계 설정을 위한 양측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소한 차이(0.8% 포인트)지만 회사의 수익성 제고보다 더 풍부한 사원복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다.

그동안 불안정하고 불투명해진 언론계 상황속에서 회사의 수익성 제고와 재정적 안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그 이면에 사원복지에 대한 요구와 근로환경 악화가 묻혀지고 있었다는 지적인 셈이다.

노조는 이런 노조원의 여론에 걸맞게 복지와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 9개 항목을 신중히 검토, 요구안에 포함했으며 노조원 뿐 아니라 가족까지 배려하는



복지 혜택까지 고려했다.

올해에는 노사의 단체협약이 예정돼 있지 않아 이번 노사협의회가 사실상 노동조건과 사원 복지 혜택 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노조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 실현 가능성 있는 제안을 사측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사내 흡연실 설치 및 협연권 보장, 주택 구입자금 지원금액 상향 등 노조원이 복지 수준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 다수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노조는 아울러 노조원의 여가 활동 지원과 자기 개발을 회사가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일부 언론사에서 실

시하고 있는 사원 복지카드제도의 도입을 노조 요구안에 포함해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 했던 어학연수비 지원 등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이런 노조원의 요구를 충분히 사측에 전달, 노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익주 노조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그동안 회사가 발전한 만큼 사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내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사협의회를 통해 시급한 사안부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환경개선 · 사원복지확대 최우선

6월 27일~28일 설문조사 결과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연합뉴스 노조원은 새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사원 복지 확대'를 꼽았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물려 삶의 질 향상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 수익 증대에 따라 사원들에게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일하기 즐거운 회사'를 원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수익의 극대화 및 재정 안정'이 새 경영진의 최우선 과제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 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무한 경쟁 시장에서 무엇보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해소를 신입 경영진에 기대하는 노조원의 바람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7~28일 각 부서의 대의원

을 통해 실시됐고 특파원 등을 제외한 총 설문대상자 387명 가운데 271명(복수응답)이 참가했다.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

- ①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사원 복지 확대 (22.8%)
- ② 수익의 극대화 및 재정 안정(22.0%)
- ③ 뉴스통신진흥법 시한 연장 또는 상시법화 (17.4%)
- ④ 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회사의 위상 제고(12.7%)
- ⑤ 인사의 투명성 등을 통한 조직 내부의 결속 (12.4%)
- ⑥ 보도의 공정성 강화(5.5%)
- ⑦ 언론시장 개방에 대한 대비(4.7%)
- ⑧ 영상 등 뉴미디어 사업 강화(2.6%)

공채 27기 신입사원 17명 노조가입

6월30일까지 수습교육을 마치고 7월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된 공채 27기 신입사원 1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17명이 연합뉴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번에 노조에 가입한 신입사원 17명 가운데 14명(사진부 1명 포함)은 편집국 소속이며 3명은 영문뉴스국 소속이다.

이들은 1월2일 입사해 5월12일까지 사회부 사건팀과 법조팀 수습교육을 마친 뒤 약 6주간 각 부서 순회교육을 거친 뒤 7월부터 각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노조에 가입한 27기 신입사원 17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권혜진, 김세영, 김수연, 김승욱, 김영교, 김윤구, 김혜성, 박지호, 서동희, 유현민, 이세원, 임미나, 임은진, 진규수, 한미희, 홍정규, 황철환

“지방순환 근무제도를 말한다” ‘로스-로스(Loss-Loss)’ 게임 징후... 무용론 서서히 대두

※ 편집자 주 : 연합뉴스 노보는 본 7월호와 8월호 2회에 걸쳐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신입사원의 지방순환 근무제의 허와 실을 짚는 기획 기사를 게재합니다.

이번 기획기사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닌 연합뉴스의 인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순환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돼 회사와 사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7월호에서는 지방순환 근무제를 경험하거나 지방 지사로 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삼는 데 이어 8월호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효과와 대안을 차근차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반론과 더불어 사내의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보 편집팀은 노조원 여러분의 고견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이 계신 분은 사내 게시판이나 노보 편집팀(hskang@yna.co.kr)을 통해 고견을 공개·비공개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습 교육을 마친 초년기자에게 여러 분야에서 두루 경험을 쌓을 기회를 주고 지사의 인력 감증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윈-윈(Win-Win)’의 취지로 제안된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면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인사제도 때문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와 갈등이 발생, 인사발령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이들을 ‘받아야’ 하는 지사 근무자는 그 나름대로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순환 근무를 마쳤거나 근무 중인 25~26기 기자직 사원과 기존 지사 근무 사원들의 구체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지방순환근무의 개선 지점을 짚어본다.

취지 훼손되는 지방순환 근무제

입사 요건으로 제시된 제도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기존 지사 근무자나 신입기자들에겐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년 이상 지사에 근무한 선배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지방순환근무 대상 신입기자는 ‘1년반만 있다 갈 텐데’라는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게 된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이들 신입기자를 바라보는 기존 지사

근무자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곧 떠날 후배인데...’라는 생각에 야근 등 근무인원을 보충하는 수준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 ‘무언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근무연수가 높은 기자가 상당수인 지사에 ‘젊은 피’를 공급해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애초 취지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지방순환근무제도의 ‘무용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방 순환근무를 했던 A 조합원은 “한창 취재와 기사작성을 배워야 할 신입기자인데도 선배들이 꼼꼼히 잡아주려는 조언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근무기간 내내 걸도는 기분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신입사원과 함께 근무를 했다는 지사의 B 조합원은 “양측 모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써 가르쳐 ‘쓸 만한’면 본사로 돌아가 버려 출입처를 믿고 맡길 수도 없고 인맥을 소개해 주기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C 조합원은 “지사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출입처를 맡는 경향이 있어 신입기자를 ‘플러스 원’ 정도로 여기고 인력난으로 그간 커버하지 못했던, 즉 말으면 좋지만 안 맡아도 크게 물먹을 일이 없는 출입처를 맡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사근무를 하는 신입기자가 소속감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지사도 배치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함께 손해보는 ‘로스-로스’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최근 사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지사 근무를 마친 D 조합원도 “1년반이 그리 짧은 시기가 아닌데도 ‘어차피 금방 떠날 텐데’라는 생각에 의욕이 없어지고 취재에 소홀해지는 일이 많다”며 “지방근무가 지방을 경험한다는 취지라면 1년이면 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시스템 하에선 지사 운영과 기사작성의 허리를 맡을 만한 후배기자를 육성하지 못한 채 기존 근무자의 근무연차는 점점 높아지기만 하는 기형적 인력구조가 심화되고, 이는 향후 몇년 안에 회사 전체에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방순환근무제도가 만성적인 지사의 인력난과 비정상적인 인력구조 해소에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부 지사에선 입사 때부터 아예 지사에 고정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신입기자를 뽑아 본사의 수습교육 뒤 지사에 배치하는 예전 방식으로 ‘유턴’ 하자는 의견까지 제기하고 있다.

쌓이는 불만과 냉소

모든 지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신입기자 사이에선 한창 기사작성을 배워야 할 중요한 초년 시절을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지방순환 근무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섞인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본사와 지사의 구분을 떠나 기사 작성의 기본 틀을 잡아야 할 시기에 이런 제도상의 ‘맹점’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결국 회사와 본인 모두 해를 입고 만든다는 것이다.

지사에 소속한 D 조합원은 “지방에서 취재를 해본다는 경험을 쌓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취지라면 차라리 수습교육 기간 중 일부를 지사 근무에 할애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걸도는’ 일부 신입기자는 지사근무에 애착이 없어지면서 선후배 간 인간관계까지 소원해져 감정의 골마저 깊어진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순환근무 대상자와 기존 근무자의 공통된 우려다.

생면부지 낯선 땅...반복되는 주거고충

지방순환 근무 발령을 받으면 신입기자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고충은 주거 문제다.

연고지를 배려하긴 하지만 서울 출신이거나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상당수인 데다 낯선 곳

에서 1년 반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1천만~1천500만원을 지원받긴 하지만 전세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개인적으로 은행 융자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월세방을 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입사 하자마자 본의 아니게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얽게 되는 셈이다.

지방 순환근무를 마친 F 조합원은 근무 당시 회사 지원금 1천만원에 빚 1천만원을 보태 전셋집을 구했고 G 조합원은 회사에서 대출받은 1천만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3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지사에 근무 중인 H 조합원도 발령 직전 급하게 집을 구했다가 지방 근무를 시작한 뒤 높은 월세의 부담으로 전셋집을 구하려다 계약기간 등 문제로 전세를 얻기가 여의치 않아 월세가 낮은 곳을 물색해 현재 몇백만원의 보증금에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

회사 지원금 한도에서 마땅한 거처를 구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게 지방순환 근무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이다.

발령일에 임박해서야 주말을 이용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방을 오가며 살 집을 구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 금액이나 위치 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연고 여부를 떠나 지사 근무시 주거가 안정적으로 해결된다면 심리적 적응이 보다 쉽고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시로 시행되는 ‘반짝 제도’가 아니라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고충에 대해





2면에 이어

회사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사에서 연속성있는 주거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전제품 등을 개인별로 사야하는 낭비도 줄일 수 있어 안정적 주거 마련 대책 수립은 시급한 문제다.

‘근무 지원용’ 지방순환근무(?)

신입기자들이 지사의 근무 환경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 지사마다 필요에 따라 근무 환경이나 시스템이 다르지만 인력부족이나 ‘그동안 그래왔다’는 관행 등을 이유로 야근이나 이른 새벽 근무를 순환식이 아닌 ‘막내’들이 도맡기도 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한때 있었던 것으로 노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 편성은 대부분 사건·사고 등 돌발 상황을 취재하고 지사의 고질적인 인력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 지사는 순환근무 대상자를 사실상 ‘근무 지원용’으로 인식하는 데서도 비롯된다는 게 당사자의 시각이다.

‘근무연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지사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근무가 지속되면서 선후배 간 불신이 쌓이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방순환근무 경험자는 지사 근무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남았다고 되짚었다.

I 조합원은 “3~4명이 당직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 지역이 넓어 멀리 취재를 하러 가야하는 일이 많아 피곤해서 졸음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J 조합원도 “선배들의 출입처 일정이나 ‘물먹은’ 기사를 대신 처리해야 하는 날도 부지기수”라며 “본사 시스템도 최선은 아니지만 지방의 근무 환경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어 답답할 때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지사 근무의 특성상 기사 작성 뿐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취재가 본사에 비해 빈번한 만큼 이런 부분의 수습 교육도 강화해야 신입기자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지방순환근무제란 ●

본사와 지방 기사를 별도로 뽑던 기존 방식과 달리 2003년 말 수습사원(25기) 선발부터 본사와 지방 구분 없이 한꺼번에 선발하고 수습이 끝나는 시점부터 일정 기간(2년 이내) 의무적으로 지방 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과 본사 구분 없이 선발된 수습기사는 수습 교육기간 종료 뒤 절반은 본사에서 근무하고 절반은 지사로 내려가 일정 기간 뒤 본사 근무자와 지방 근무자가 서로 자리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수습기자 선발방안을 사규에 별도로 명문화하지 않고 현재 국간 보직 순환근무제도를 취하는 형식으로 운영했으며 작년 이런 내용을 사규에 포함, 비로소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는 지방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본사에서 일할 기자에게도 지방 근무 경험을 가지게 하려고 마련됐으며 장기적으로 본사와 지사로 나뉜 회사 인력 선발 구조가 순환체제로 바뀔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전망이다.

첫 대상자인 25기 공채사원 7명이 2004년 6월 9일자로 경기지사와 인천지사와 충북지사, 경남지사 등에 발령받아 1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뒤 작년 12월 1일자로 본사로 복귀했고 먼저 본사에서 근무한 25기 11명이 이들과 교대, 현재 각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어 26기 사원 6명이 수습교육 뒤 작년 6월 10일자로 경기지사와 경기북부지역, 전북지사, 대구경북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에 1명씩 발령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26기 본사 근무자 6명과 교대할 예정이다.

올해 7월 1일자에 27기 7명이 제주지사를 비롯, 경기지사와 대구경북지사, 광주전남지사 등에 내려가 1년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된다.

현재 회사에서는 지사 근무자 중 근무지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 중 1천만원은 무이자, 500만원은 연이율 3%이며 매월 급여에서 60분의 1 금액을 공제하고 본사 근무 발령시 잔액을 일시 상환하게 된다.

“지사근무 준비 시간도 없고 정보도 없어”

‘연합뉴스 이 정도였나’ 실망감도… 공채 27기 하소연

7월1일자로 지사 근무 인사발령이 나 각 근무지로 배치된 공채 27기 조합원은 지사 근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를 마련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연고가 없는 지사 발령으로 1년 반을 살아야 하는 전·월세집을 구하고 이사도 해야하는데 지역 사정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령일에 임박해 자신이 가게 되는 지역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또 어느 지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해당 지사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느 출입처를 취재하는지 등 정보도 충분하지 않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지사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지원자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27기 A 조합원은 “지사 근무의 윤곽이 발령 2주전에 잡히는데 부서순환 근무 중 거주지 마련 등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며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당장 급한 마음에 어디든 구해보자는 식으로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따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발령일 한 달 전쯤에 지사 근무를 확정해야 주말 등을 이용,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선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출신의 27기 B 조합원은 “발령 2주를 남기고 서울에서 수시간 떨어진 지사가 결정돼 다들 정신이 없어 ‘폐닉’ 상태였다”며 “부서 순환교육을 받는다지만 다들 지사근무에 마음이 쏠려있어 부서 교육도 집중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주거 마련, 생활 환경의 급변 등 이유로 수습 교육 뒤 바로 지사에서 근무하려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먼저 지사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상향, 근무기간 단축 등 ‘어드벤처’를 주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번 공채 27기 사원 가운데 지방순환 근무 대상자는 사진부와 외국어뉴스부를 제외한 14명으로 이들 중 지사 근무(정원 7명)를 먼저 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이번에 지사에 발령받은 C 조합원은 “지사의 도움으로 조건이 좋은 방을 소개받았는데 집주인이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해 발령 1주일전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회사측은 정식 인사발령이 안 난 상태라 주택자금 대출이 어렵다고 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사 발령일 전날까지 회사의 각 부를



7월 1일자로 지방순환 근무제도에 따라 인사발령을 받은 공채 27기 사원들. 18명 가운데 사진기사와 외국어 뉴스국 사원 4명을 제외한 14명 중 7명이 지사 근무 발령을 받아 근무중이다.

거치는 부서 순환 교육 일정을 짜 놓은 것도 이런 시간부족에 한 몫을 한다고 이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부서 순환 교육이 체계적이 아닌 선배들의 얼굴을 익히고 회식에 참여하는 정도라는 게 수습사원의 지배적 인식 이어서 지사 근무 준비를 해야하는 이들의 불만은 더 커가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 상환 규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5년간 분할 상환 규정에 따라서 8월부터 매달 수십만원씩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쓰는 것이라면 차라리 1년반 뒤 본사로 올 때 일시 상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매달 내는 월세와 대출 상환금을 합

면 50~60만원을 꼬박 꼬박 내는 셈인데 신입사원에게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에 대해 “대출금이 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원금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하고 일시 상환방식으로 하기엔 회사가 재정적으로 견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D 조합원은 “지사 근무를 해야하는 사람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준비나 배려는 없이 지사 근무 의무사항만 만들어 놓고 ‘지사근무를 알고 입사했지 않느냐’는 막무가내 식”이라며 “회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연합뉴스가 이정도 밖에 안되냐’ 하는 실망감도 들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엔 ...

기협축구대회에 대한 단상

※ 연합뉴스 노보는 이번 호부터 조합원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내 생각엔..'이라는 코너를 씁니다.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또는 일상에서 문득 떠오랐던 생각을 자유롭게 쓰셔서 노보 편집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익명으로 게재됩니다.

시간이 꽤 흐르는데다 6월의 월드컵 열풍에 더더욱 먼 기억이지만 5월은 언론계의 월드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자협회 축구대회가 열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당시 훈련 참가와 사내의 지원을 축구하는 글이 심심찮게 게시판에 올랐던 것 같다.

그 글을 보면서 나는 '또 기협 축구 대회가 열릴 때

가 됐나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보다'는 생각이 뇌리를 잠시 스치고 말 뿐. 나에게는 더 이상의 무엇이 아니다, 기협축구대회는.

흠.. 내가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들과 대결을 벌인다는데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건가.

잠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랴. 여자로 태어나 축구라곤 해본 적도 없는데, "저도 애사(愛社)하고 싶습니다!"라며 축구 연습에 뛰어들어 함께 사우나하며 시원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 한때 나도 기협축구에 발 담가 본 기억이 가물가물 나기도 한다. 수습 시절 '축구사역'이라고 툴툴대

며 연습에 동원되던 남자동기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대회에서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그라운드 언저리에서 "김xx 멋져!"를 외치던 시절.

그 때 옆에서 엔트리에 끼지 못한 모 신문사 남자 수습들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치렁치렁한 금발 가발을 쓰고 아찔(?)한 세일러문 옷을 입고 나타나 하이톤으로 응원을 하며 자신의 생물학적 성 정체성을 회사를 위해 기꺼이 내던지기도 했다. 역시 응원은 이쁜 치어 리더들이 해야 제 맛이 라고 생각한 건지.

써놓고 보니 내가 월드컵 때 방구석에 처박혀 신경질적 증상을 보이는 안티 축구인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아니다 난 고등학교 때 수업 빼먹고 축구를 보러 갈 정도로 축구광이었고 애사심도 누구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ㅎㅎ

'축구하기', '군대서 축구한 얘기' 들어주는 싫어 해도 사람들과 떼거리로 놀긴 좋아하는 나도, 각자 다른 취향을 가졌을 여기자들도, 축구 못하는 남기자들도 봄 체육대회에 꺼져 놀고 싶다. 등산가고 피구하는 가을 체육대회처럼. 기협 축구대회를 무성(無性)적 스포츠인 기협 배드민턴 대회, 기협 이어달리기 대회로 만들면 안 되나.

그러면 건장한 축구선수로 분한 사우들을 힐끗 바라보며 우리 사회, 그래도 어느 곳보다 성 평등이 실현된 곳에서 일한다고 자부해 온 언론사에도 여성이 배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패배감은 안 들 텐데. 이제 신입 중 절반이 여자라던데..



지난 5월 13일 불교방송과 기협축구 1차전 장면 -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기협축구 사내게시판에서 퍼옴)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에 격려상 2편 선정

공정정보위원회(간사 권영석)는 이달의 참글상(5월 송고분)에 사회부 조성현 조합원의 「범죄로 아파 잃은 남매 구조금은 고작 1천만원」 등 관련기사 2건과 엔터테인먼트부 정 렬 조합원의 「北 "우리도 독일 월드컵 보고 싶어"」 등 2편을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참글상을 수상한 조 조합원의 기사는 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최대 1천만원으로 이는 15년 전인 1991년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허점을 지적해냈다.

이 기사는 범죄 이면에 감춰진 피해자의 고통과 국가의 지원시스템을 고발하고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 책임을 촉구했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사회적 이슈로 제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성 언론의 지면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와 국가 제도의 부실함을 드러내 충분히 참글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공정정보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져 위원회는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조 조합원은 "뜻밖에 참글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바쁜 일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그늘을 비추는 기사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격려상으로 선정된 정 조합원의 기사는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열차 시범운행을 돌린 취소하겠다고 통보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에 북한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단독 취재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또 남북간 방송 교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고 각 방송매체와 포털사이트, 주요 일간지에서 이를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성과도 거뒀다.

공정정보위원회는 이달 10일까지 6월 송고분에 대한 참글상 후보 기사 추천(nojjo@yna.co.kr)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자는 노조나 각 부서 공정정보위원회에 추천 기사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미 FTA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 5일까지

연합뉴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저지 언론노조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연합뉴스 지부를 비롯한 각 지.본부가 투표를 마친 뒤 7일 오전 전국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동시에 개봉돼 개표가 이뤄진다.

투표장은 본사 6층 노조 사무실에 마련됐으며 신원확인 후 찬성과 반대에 기표하면 되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각 지사는 대의원을 통한 설문조사로 대신한다.

기사예고 - 의견 · 제보 받습니다

노보 편집팀은 다음호 기사로 「회사 구내식당 이대로 좋은가」와 「새 기사입력 시스템 놓고 논란 분분」(이상 가제)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업무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노조원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가 정확하고 공정한 기사 작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제보를 e-메일(hskang@yna.co.kr)로 주시면 기사 작성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